



2004농산업 포럼

# 수출 · 내수경기 양극화 뚜렷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

시장개방 충격 완화장치 마련하고 농식품 안전성 확보돼야  
농산업체 · 농업 발전 궤 같아, 산업평가 차별 안될 말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일본도 장기 침체에 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서히 회복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잠재강국들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내

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지난해 하반기 3% 내외의 경제성장에 그쳤다. 또 시장개방의 충격 완화장치를 마련, 개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경제의 안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부분을 직접직불제로 보전해야 한다. 지

난해 농기계, 농약, 비료 및 종자산업 매출액은 약 27.4천억원으로 이는 '02년에 비해 5.5% 감소 것이며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약산업은 올해도 할당관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업인 부담을 감소해 나갈 것이며 05년까지 고독성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협의 계통 자재 취급규모는 1조4898억원으로 조합의 계통 이용율은 5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용자재 가격에 대한 불만과 전문성, 기술력 부족, 물류기능 취약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다. 일본 농약시장은 감소 추세에 있어 해외시장 확대와 내부경영 개선,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이 모색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농산업 정책 육성과 발전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를 갖고 한국농어민신문사 주최로 「2004 농산업포럼」이 개최됐다. 농림부, 농진청, 학계, 농산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시사각각 변하는 국내외 경제동향과 농업동향에 대응키 위한 농산업정책을 진단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수출 약진·내수 부진 양극화 뚜렷 농식품 안전성 확보, 유통 개혁 있어야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2004년 경제·경영환경 전망」이란 초청강연을 통해 세계경제는 서서히 회복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경제는 저금리, 세금 감면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

되고 있고 일본 또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천연자원을 보유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잠재 강국들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3% 내외의 경제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내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율은 2.4%였는데 올해는 3.2%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상승 국면인데 특히 IT산업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2198억 달러 정도 전망되어 한국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때 수출경기, 세계경기, IT업종, 대기업 등은 경기호조를, 그리고 내수경기, 국내경기, 비IT업종, 중소기업 등은 경기가 악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농촌 농산업의 현실과 비전」이란 두 번째 초청강연에서 현재 국내 농업은 90년대 정부의 투융자 정책 결과 생산성은 향상은 이루었으나 환율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실질 농업소득은 평균 1.7% 감소하는 추세로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한 농가는 22.4%나 되고 특히 2002년 기준, 부채 비율은 40%를 넘는 위험한 농가가 12%나 되는 실정이다. 농산업 역시 종자의 경우 다국적 기업인 세미니스, 신젠타 등 10개 기업의 시장 지배율이 1/3을 넘었고, 농약은 80%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시장 장악을



목표로 국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농산업을 대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 농가는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촌의 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을 구현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신수요 개발과 유통혁신으로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의 개별 판매에서 전업 농 작목회 중심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브랜드가 확대돼 조합단위로 발전해야 하며 주거 및 휴양, 산업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노인 인구비중이 높은 농촌의 사회복지를 위해 공간적·경제적인 불리성을 보완하는 사회보험·보건 혜택과 보육·교육서비스가 시급하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  
농업 생산비 절감 최우선  
농약회사 인수·합병 활발**

배원길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장은 「2004년도 농산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농기계, 농약, 비료 및 종자산업 매출액은 약 27.4천억원으로 이는 02년에 비해 5.5% 감소한 것이며 00년에 비하면 19.4%나 감소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DDA협상 대응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농자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자재비 절감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농약산업은 올해도 할당관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업인 부담을

감소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신규등록 및 출하물량을 보류하고 05년까지 고독성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폐지할 계획이다. 농약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부정 불량 농약의 유통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천적, 미생물, 저독성 농약의 개발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농업인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충선 농협중앙회 자재부장은 「농협의 영농자재 사업방향 및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농협의 계통 자재 취급규모는 1조 4898억원으로 조합의 계통이용율은 5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용자재 가격에 대한 불만과 전문성, 기술력 부족, 물류기능 취약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농업·농촌 경제 악화 및 경지면적 감소, 농촌인구 감소, 노령화 등이 가속되고 있어 농업생산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구매교섭력을 강화,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전략적 마케팅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농협은 농자재 계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향후 농업 위축에 따른 구매사업방식을 개선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농약, 비닐하우스용 필름, 유기질비료(퇴비포함) 지역연합구매사업을 정착시켜 구매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06년 완공을 목표로 자재유통센터를 설립해 물류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원료시장에도 적극 진출, BB원료 원료비료, 농약원제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연구위원은

「일본 농기자재 시장의 변화와 정책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종자시장 규모는 약 3000억엔을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10년 전보다 50% 정도 증가한 수치로 꾸준한 성장이 예측된다고 내다보았다. 반면 농약시장은 감소 추세에 있어 2001년 시장규모는 약 3800억엔 수준으로 과거 5년 전보다 300억엔(7.3% 감소)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농약산업은 해외시장 확대와 내부경영 개선,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이 모색되고 있어 2001년 수출은 전년대비 11.8%나 증가한 7억8000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일본 내 농약회사간 인수합병도 활발한데 스미토모의 경우 지난 92년 스페인회사였던 케노카드사를, 2002년에는 다케다의 농약부문을 매수했다. 인수합병 외에도 의약, 동물약품, 유전자 산업 등과 합병 또는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업 정책 가운데 하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이고 이에 맞춰 정책과 수단 등이 강구되고 있다. 따라서 잔류농약에 대해 특히 예민해 수입농산물의 농약잔류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 등록투자비 부담 경감 장치 마련돼야

한편 이날 종합토론자로 나선 농약공업협회 최운홍 전무이사는 "전자나 의약 등은 성장 면에서 정부가 기업 모두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약은 성장가능성이 없고 기술적으로 이미 포화된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농약 연구에 대한 투자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약은 세계적으로 30조 원대, 국내는 약 9천억원대의 적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

고 고부가가치 분야이며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엔진 역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업의 한축을 형성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농약 연구는 그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신물질의 연구개발비는 500억 이상이 소요되나 그중 독성 등 안전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200억에 이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뒤 "독성시험비 등은 국내환경에서 가장 큰 부담이다. 그러므로 개발가능성이 충분한 물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배원길 농업기술지원과장은 "가능성 있는 농업기술 및 연구에 대하여는 농림기술개발과제에 선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전무는 이어 "현재 농약은 농협과 시판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농협 40%, 시판상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간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있다. 3,200여개 시판상에서 총 6,000~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시판상당 약 2억여원 매출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 서로 공생하며 이끌어 갈수 있는 올바른 유통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충선 농협중앙회 자재부장은 "농협은 농약시장의 완전한 지배보다는 농민의 이익보호와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시장을 교란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농약정보**